



1920년 4월 1일 창간

민족의 표현기관으로 자임함  
민주주의를 지지함  
문화주의를 제창함

서울 20~25도 경기 22~27도

2007년 9월 20일 (음력 8월 10일) 목요일 단기4340년

The Dong-a Ilbo

전화 02-2020-0114 구독·배달안내 1588-2020 제26798호 5판

www.donga.com

뇌물용처 수사중지 요청

## 검찰 “보고서 작성했다”

### 부산지검 시인... 특수부장이 구두로 보고 정운재씨 구인장 발부... 오늘 영장심사

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 씨와 정 전 비서관 등의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지검장 김태현) 특별수사팀은 19일 정운재(44) 전 대통령전비서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4·5면에 관련기사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김 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로비 주선 대가로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라고 말했다.

부산지검은 이날 정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했으며 영장실질심사는 20일 중열릴 예정이다.

부산지검은 또 이날 정상근(53·구속기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받은 뇌물 1억 원의 용처 수사와 관련해 12일 전준표(53) 국세청장으로부터 수사 중지 요청 발언을 들은 뒤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확인했다. ▶본보 19일자 A1·3면 참조

“국세청장 진술 청취 보고”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는 “2007년 9월 13일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라고 보고서 작성 날짜와 수사 검사의 소속 부서가 명시돼 있다. 보고서에는 “전준표 국세청장으로부터 ‘정 국장이 수수한 뇌물 1억 원의 용처를 더 이상 조사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청취하고 이를 메모하였으므로 그 메모지를 사본 첨부한 뒤 보고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보고서 끝에는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의 도장이 찍혀 있다.

김태현 지검장은 보고서에 대해 “수사검사가 12일 정 전 청장의 자료를 제출 받기 위해 국세청을 방문했을 때 국세청장과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국세청장이 용처 수사에 가법계 관심을 표명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수사검사로부러 이 내용을 보고받은 특수부장이 다음 날 오전 ‘전 국세청장이 용처 수사가 잘 되고 있는나고 물은 뒤 (국세청) 조치 안정을 위해서라도 수사가 빨리 종결되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구두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김 지검장은 또 “보고서는 수사검사가 구두 보고 뒤 사후에 작성한 것이라 보고서가 있다는 사실은 오늘(19일) 처음 알았다”며 “전 국세청장의 의견은 관심 표명일 뿐이어서 특별히 의미를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수장이 용처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에게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고 검찰이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만든 것이 확인됨에 따라 전 국세청장의 발언 배경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검찰은 또 정 전 청장이 지난달 구속된 9일과 전날인 8일 전 국세청장에 건 두 차례 전화가 모두 전 국세청장의 휴대전화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통화내용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부산=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반기문 총장 첫 유엔총회 주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왼쪽)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제62차 유엔총회가 18일 미국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개막했다. 반 총장과 마케도니아 외교장관 출신 스텐진 케림 총회 의장(가운데), 무하마드 사반 총회 사무차장이 이날 총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번 총회는 기후변화와 지역분쟁, 종교와 문화 간 갈등 치유방안 등 162개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유엔본부=AP 연합뉴스

Digital Life IT 특집 C1~8면

## 신정아씨 美출국전 변씨와 통화

### 검찰 “변씨 출국 권유맨 범인도피혐의 적용” ‘영배스님 사찰 10억배정’ 관련 울주군수 조사중

‘가짜 예일대 박사’ 신정아(35·여) 씨가 7월 16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하기 직전 변영준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19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변 전 실장과 신 씨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사전 입 맞추기를 했다는 의혹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A6·12면에 관련기사

신 씨의 변호인인 박종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 씨가 출국 직전 변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가짜 학위 의혹이 일고 있는데 억울하다. 알아봐라 미국으로

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변 전 실장은 신 씨에게 ‘혼자 미국 가서 확인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다른 방식(로펌을 통해 알아보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조언했다’면서 “그러나 신 씨가 미국에 있을 때는 변 전 실장과 통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이 신 씨에게 출국을 권유했다면 범인도피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구체적인 통화 기록과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변 전 실장을 16일

에 이어 이날 다시 불러 받듯게까지 직권남용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했다.

검찰은 신 씨의 가짜 학위 의혹이 일 당시 신 씨를 두둔했던 동국대 재단 이사장 영배 스님이 창건한 울산 울주군의 흥덕사에 울주군이 1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변 전 실장이 관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수뢰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영창섭 울주군수를 18일 소환 조사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정상명 검찰총장 주재로 신 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고 조만간 신 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한 뒤 이번 주말경 구속영장을 재청구기로 했다.

홍승영 기자 gaea@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대선후보측서 기업에 돈 요구 첩보” 국세청장 “감시 강화”

전준표 국세청장은 19일 “대선 관련 자금에 대한 첩보가 있어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청장은 이날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무슨 후보의 포럼이나 무슨 ‘회’ 등에서 일부 대기업에 윤영비조로 자금을 요구한다는 첩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까지 기업들이 대선 비자금을 조성한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 중인 ‘론스타’에 대한 과세(課稅)와 관련해 “입증 자료와 논리의 전 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나름대로 철저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 씨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탈세 첩보가 있어(김 씨 소유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있으며,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충북 보은 등 59개 시군구 중소기업세 70% 감면

## 수도권 제외 “역차별” 반발

### 균형발전 지역분류안 발표

충북 보은군, 강원 횡성군, 전북 정읍시, 경북 상주시 등 59개 시군구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기간 제한 없이 법인세 7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이 같은 혜택에서 배제돼 ‘수도권 역(逆)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A10면에 관련기사

정부는 19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공동 주최로 ‘지역 발전에 따른 지역 분류 시안 마련 공청회’를 열고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발전 정도에

따라 4개 지역으로 나눈 지역분류안을 발표했다.

낙후지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에 있는 기존 중소기업과 이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기간 제한 없이 법인세를 70% 감면받고 건강보험료 기업부담분도 10~20% 감면받는다. 대기업이 이 지역으로 본사를 옮기면 10년간 법인세를 70% 감면받고 이후 5년간 35%를 감면받게 된다.

또 충북 충주시, 강원 춘천시 등 55개 지자체는 ‘2지역’(경제지역)으로, 경기 연천군, 충남 천안시, 강원 원주시, 전남 광양시, 경남 마산시 등 62개 지자체는 ‘3지역’(성장지역)으로 분류됐다.

반면 서울 25개구와 인천 8개구, 경

낙후지역 지정 59곳

- 충청권 10곳 •강원권 7곳
- 호남권 21곳 •영남권 21곳

기 25개 지자체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법인세 감면 혜택 등을 받지 못하는 ‘4지역’(발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같은 정부 방안에 대해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분류하고, 혜택은 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때만 주겠다는 것은 사실상 경기도 역압 정책”이라며 “경기도는 이번 시안을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발행면수 A36 B12 C8

## 한나라 “다른 몸통 있다는 사실 명백해져”

한나라당은 19일 정상근 전 부산 지방국세청장이 건설업자 김상진 씨에게서 받은 뇌물 1억 원의 용처에 대한 전준표 국세청장의 수사 중지 요청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전 국세청장의 소환 조사를 요구했다.

정영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김상진 씨 사건과 관

련해 부산에서는 채모 씨라는 사람이 고문으로 있으면서 로비를 하고, 그 뒤에는 다른 몸통이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은 “전 국세청장이 뇌물 1억 원의 용처 수사 중단을 요청한 것도 몸통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중훈 기자 taylor55@donga.com

## 보험도 투자도 한 자리에서! 한화금융프라자에 오시면 가능합니다

대한생명, 한화증권, 한화손해보험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위하여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화금융네트워크만의 앞선 금융서비스. 이제, 한화금융프라자에서 만나보십시오.

한화금융네트워크 대한생명 / 한화증권 / 한화손해보험 / 한화투자신탁운용 / 한화기술금융

